

이재명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이해충돌 차단" 부동산 대책 고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9 [청와대통신사진기/지대]

檢개혁 1단계 완료에 '다주택 공직자 배제' 카드로 부동산 개혁 박차

文정부 내사태 등 반면교사 엄격한 자세 주문... "정권 성패 달린 일"

다주택자 등 부동산 정책 라인 배제 지시... 이해충돌 방지해 정책 신뢰 확보

이윤리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도 당부했다.

이에 조만간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 중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개인사업자용 대출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 경고를 내렸다.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을 받기 전에 대출금을 자진 상환하라고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X에 국제성이 전수 검증에 나선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고 국제성 세

무조사까지 받은 뒤 강제로 대출을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가운데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 인지는 분명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의 시선이 아니라 집 없는 국민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삶을 기준으로 세워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더 국민의힘에서 이를 두고 '보여주기 정치'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하나. 다주택자들이 정책 설계 과정에서 빠지게 되면, 6채를 보유한 장동혁 대표부터 그 논의에서 빠질까 두려운 것이냐"고 꼬집었다.

또 "국민의힘은 비난에 눈이 멀어 본질을 흐리지 말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결정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에 발끈하면 할수록, 그들이 진정으로 지키고 싶은 것은 서민의 주거 안정이 아니라 다주택 기득권이라는 사실만 더욱 선명해질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채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일천 차단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입법이 완료됨으로써 검찰개혁 후속 논의의 첫 단계가 일단락된 만큼, 또 하나의 핵심 과제인 부동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과 전날 X에서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등 한동안 뜸하던 '부동산 SNS'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동시에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향해 여전히 확고한 부동산 개혁 의지를 보여주면서 긴장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체적질'에 나선 것이라 해석도 나온다.

다주택 공직자 배제는 그간 부동산 급등기 민심 이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 바 있지만,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 등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아

니라)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며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이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를 현실화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이다.

현재 정부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고위 공직자 및 참모 가운데에는 거주하는 집 외에도 가족이 서울 강남권에 일부 부동산 지분을 보유한 사례 등이 있어, 보고라인 배제 등이 실제로 이뤄질지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주택과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의 어느 직위가 배제 조치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 이미 다주택 보유분을 매물로 내놔도 팔리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고가 주택이나 과다 보유의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등 구체적 판단도 현황 조사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직 팔리지 않았어도 시장

에 내놓기만 했으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시간을 갖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특정인을 지목해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 게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에서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다주택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주택 처분이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청와대 내에서 나오고 있다.

앞으로 다주택 보유에 유리하지 않도록 '개인의 규칙'을 만들어야 할 '심판인' 공직사회가 조금이라도 불공정하게 보일 경우, 과거 문재인 정부의 'LH 사태'에서처럼 부동산 정책은 물론 정부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직사회를 향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더 엄격한 정책을 만들어내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초토화' 위협에 이란 "더 심한 대응" 맞불

美, 호르무즈 재개방 요구하며 사실상 '최후통첩'

이란, 4천km 떨어진 인도양 英·美공동기지에 탄도미사일 발사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 22일째인 21일(현지시간) 양측은 서로 핵시설 인근 지역을 타격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요구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에 나선 가운데, 이란은 더욱 파괴적인 수준의 보복을 예고하면서 향후 전쟁이 더욱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란은 이날 핵시설이 위치한 이스라엘 남부 디모나시(市)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국의 핵심 핵 시설인 나탄즈 우라늄 농축단지를 공격한 데 따른 보복 차원의 공격이다.

이에 따라 디모나에서 3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인근 아라드 마을에서도 중상자 13명을 포함해 최소 5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란과 이스라엘 당국은 각각 핵시설

인근에서 비정상적인 방사능 수치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측이 서로 핵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한 공격을 주고받으며 핵 위협은 점점 더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후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에 나섰다. 이스라엘군은 디모나 등 남부 도시 피격 이후 수 시간 만에 22일 새벽 성명에서 "이란 테러 정권을 타깃으로 테헤란 중심부 공습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란을 향해 '초토화'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만약 이란이 지금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아무런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

해 초토화(obliterate)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이 원유 교역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이어가자, 이란의 국가 기반 시설까지 타격 범위를 넓히겠다고 고강도 압박에 나선 것이다.

미군이 중동 지역에 해병대를 추가 파병하기로 한 데 이어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비한 내부 준비에 착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디에도 병력(지상군)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보낸다면 당연히 여러분(기자들)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더욱 심각한 보복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란군은 "만약 적대국이 하나의 기반 시설을 공격한다면, 우리는 여러 개의 시설에 대해 보복할 것"이라 덧붙였다.

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전했다.
 하준수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Gyeonggi-do Market Revitalization Agency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행사기간
3.20.(금) ~ 3.29.(일)

행사장소
도내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500개 상권 내외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